

## 1.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, 꽃게, 참조기 추가

해양수산부 | 유통정책과 (☎ 044-200-5447~8)

'17년 1월 1일부터 음식점(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)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\*에서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됩니다.

\*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뽕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

- 「어」에 따라 오징어, 꽃게, 참조기 등 3개의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또한, 구이용, 탕용,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.

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도 높아집니다.

-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(21cm×29cm) 이상에서 A3크기(29cm×42cm) 이상으로 커지고,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

###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

- 추진배경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
- 주요내용
  - 시행령 개정
  -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(9종→12종)
    - \* 오징어, 꽃게, 참조기 추가(모든 조리 음식)
  - 원산지 표시판 A3크기 이상,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
- 시행일 개정 법령 시행 : 2017. 1. 1. 의무시행(2016. 12. 31.까지 종전 규정 병행)

## 2.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

| 해양수산부 | 도교섭과 (☎ 044-200-5565~6)

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도록 사법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먼저, 무허가 중국어선의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하고,
- 무허가어선 등에 대한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한·중 양국간 공동단속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- 기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순시 및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추진과 함께, 한·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한중 협력 강화한다

### 불법 중국어선 사법 처리 강화 및 한·중 협력 강화 항목

- 추진배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및 한중 협력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법률 개정
    - 담보금 상향(2억원→3억원)
    - 불법 중국어선 몰수 의무화(양무어선)
  -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
    -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
- 시행일
  - ① 개정 법률 시행 : 2017. 1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  -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: 2017. 1월(잠정)

## 3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

| 해양수산부 |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31, 5432)

수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,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수협법 시행('16.12.1)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.

-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, 자본을 1.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또한, 수산물 유통·판매·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수협중앙회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.

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, 수협은행도 안정적으로 은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·감독해 나가겠습니다.

- 우리부에서는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,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수협중앙회,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

### 수협 사업 구조개편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 추진
- 주요내용
  - ① (지배구조 개편)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 단축(4년→2년),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(4명) 등 경영의 책임성 강화
  - ② (경제사업 활성화)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함·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, '경제사업 평가협의회'를 통해매년 평가하여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
  - ③ (신용사업 독립법인화)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.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
- 시행일 2016년 12월 1일

## 4.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 마련

| 해양수산부 | 연안계획과 (☎ 044-200-5266)

공유수면 상공을 이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017년 상반기부터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이 기존 100분의3에서 100분의 1.5로 낮아지게 됩니다.
-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부담 줄인다

### 신설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근거 내용

- 추진배경 공유수면 상공 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근거 마련
- 주요내용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근거 마련
- 시행일 2017년 1월  
※ 입법 진행중,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,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

## 5.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 개발

| 해양수산부 |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8)

태풍, 적조 등 자연재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적용 대상품목을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합니다.

\* (현행) 넙치, 조피볼락, 돔류, 전복 등 24개 → ('17) 향어, 메기, 터봇

또한, 양식 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상 문제점을 어업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.

- 해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관련 보험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특약 세분화(고수온, 저수온)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,
-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상품을 개발하여 재해 피해 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###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개발

- 추진배경 태풍, 해일, 호우, 동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어가의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전 도모
- 주요내용 ① 태풍(강풍), 해일, 풍랑, 호우, 대설, 동해 등에 대한 보상적용 대상 품목을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  
② 주계약에 특약으로 어가별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세분화
- 시행일 2017년 6월

## 6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

| 해양수산부 |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8)

한·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'17년부터 상향 조정(500천원→550천원) 됩니다.

-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을 '17년부터 매년 증액하여 '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\* '17년 사업계획 : 예산 9,030백만원, 20,120 어가

-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#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액 상향

- **추진배경** 한·미 FTA관련 與野政 합의('11.10) 및 농어업분야 보완대책('12.1)에 따라 '12년 시범 도입 후, '14년부터 본 사업 추진  
\* 사업대상은 육지로부터 8km이상(8km미만은 정기여객선 1일 3회 이하) 떨어진 도서 (섬)지역(「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3조)
- **주요내용**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'17년부터 상향 조정 (500천원→550천원)  
② 향후 '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
- **시행일** 2017년 1월

## 7.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

| 해양수산부 | 수출가공진흥과 (☎ 044-200-5481)

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- 지금까지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, 원료 공급검수성적서, 대금결제내역,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습니다.
- 그러나, 앞으로는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(수산물품질인증서,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,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, 유기수산물인증서) 1종 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국내에서 생산되는 8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보다 간소화되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관세청장이  
인정하는  
원산지(포괄)  
확인서 고시 개정

-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고시 개정
- 주요내용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
- 시행일 2016년 12월 1일

## 8. 수산 벤처·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

| 해양수산부 |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34)

수산업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'15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.

- 원물을 잡고 단순 가공 후 유통·판매하는 일 이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추가하여 새로운 수산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.
- 이러한 사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·경영 컨설팅,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현재는 부산, 제주,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'17년 1개소 신규센터를 추가로 공모선정할 예정입니다.
- 향후에도, 지속적으로 수산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·강화하겠습니다.

###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

- 추진배경 수산분야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·창업 육성·지원을 위한 수산특화 창업지원센터의 확대 필요
- 주요내용 신규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추가 예정 (공모선정)
- 시행일 ① 사업공고('16.12.21~'17.1.20)  
②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('17.1월중)  
③ 창업투자지원사업 시행('17.1~12월)



## 9.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

| 해양수산부 | 어업정책과 (☎ 044-200-5515)

현재까지 보급되지 않았던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을 다양화하여 어업인들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규격이 1종류(3호)만 개발되었으나 3가지 종류로 확대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크기의 꽃게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초기 어구사용 유도를 위해 어업인 추가지원액을 꽃게자망 등 신규 진입 어구에 한해 상향 조정(기존 어구가격의 10% → 20%)할 계획입니다.

\* 인센티브 : 기존 나일론 가격의 10%로 추가 지원액

### 2017년 생분해성 꽃게자망 보급 계획

- 추진배경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망 중 가장 규모가 큰 꽃게자망 보급 추진
- 주요내용 생분해성 꽃게자망의 사용 유도를 위해 어업인 인센티브 지원액 상향 조정(기존 어구가격의 10%→20%)
- 시행일 2017년 1월

## 10.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

| 해양수산부 | 어업정책과 (☎ 044-200-5517)

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감척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어선감척을 추진할 때에도 대상자 선정과 어업자 지원에 각각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.
- 2017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법령바다>입법예고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#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절차 간소화 추진계획

- 추진배경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
- 주요내용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고, 신속한 감척을 집행(수산조정위원회 심의→삭제)
- 시행일 2017년 1월(잠정, 정부이송 대기, 본회의 의결('16.11.17))

## 11.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

| 해양수산부 | 항만운영과 (☎ 044-200-5777)

'17년부터 무역항의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자본금 및 상시고용인력 등 요건을 갖춰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
\*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개정하여 근거 마련

- 그동안 항만보안 취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영세 경비업체 난립과 특수경비원의 높은 이직율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,

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비·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항만보안 강화가 기대됩니다.

###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

- **추진배경** 항만 보안 취약요인인 영세업체 난립과 경비원의 높은 이직율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('16.12.2. 공포)
- **주요내용** ① 일정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의 요건을 갖춰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  
②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 요건은 하위법령 개정 시 항만의 규모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고, 특수경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질 전망
- **시행일** 2017년 6월 중

## 12.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

| 해양수산부 | 연안해운과 (☎ 044-200-5735)

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'17년 1월부터 도입·운영됩니다.

- 국민 누구든지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고, 부정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- 지금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하여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웠으나,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 내부고발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내항화물운송  
사업자  
유류세보조금  
부정수급  
신고포상금  
지급 등 운영에  
관한 고시 제정

- 추진배경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,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” 제정
- 주요내용 ① 부정수급 행위 확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 
② 지급대상자 확정 시 부정수급량 등에 따라 포상금 산정·지급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13.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

| 해양수산부 | 항만물류기획과 (☎ 044-200-5755)

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던 복잡한 평가기준·지표를 각 항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대폭 위임합니다.

- 현재까지 「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」에서 그 지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에게도 행정적, 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.
-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, 평가지표·기준을 항만별 수요자 성격에 맞출 수 있도록 「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」을 개정 시행합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법령바다>훈령/예규/고시/공고>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###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

- 추진배경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제도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평가주기 연장(3년→5년)  
② 사업실적평가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각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항만의 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위임
- 시행일 2017년 1월

## 14.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·분양환경 조성

해양수산부 | 항만정책과 (☎ 044-200-5920~1)

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·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'17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.

-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·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 
-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·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또한,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이 개발하거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.
- 이 밖에도,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제도가 신설됩니다.

### 항만법 개정

- **추진배경**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을 위해 항만법 개정
- **주요내용** 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·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 생략  
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의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해짐
- **시행일** 2017년 6월 중

## 15.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

| 해양수산부 | 항만투자협력과 (☎ 044-200-5965~6)

공고 대상 사업 외 허가대상사업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투명화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공고 대상사업\*에 한하여 평가배점 및 배점기준이 마련 되었으나, 2017년 1월부터 허가대상 사업(유지보수 제외)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게 됩니다.

\* 30억 원 이상의 귀속 사업 및 투자비 보전 준설사업 등

- 또한, 기존 공고대상사업의 평가항목과 신설되는 허가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중 '참여자의 구성' 배점을 '20점'에서 '25점'으로 상향하여 실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.

비관리청 항만공사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심사 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외에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도 인정하여 민간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재원조달 계획 심사 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해 인정하였으나, 개별법에 따른 농협, 수협, 산업은행 등의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하게 됩니다.

## 해양수산부

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받는 기술자문의 범위를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소규모 사업도 기술자문 절차를 이행하였으나, 앞으로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.
- 또한, 기술자문을 받는 기관도 해양수산부(지방해양수산청)와 시·도지사에 한정된 것을 공공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
**[참고]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해수부,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대폭 개선,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

###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

- **추진배경**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체계화·명확화·구체화하고, 항만이용자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
- **주요내용**
  -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(공고대상사업→허가대상사업)
  - ② 참여자의 구성 배점 상향(20점→25점)
  - ③ 재원조달 인정 금융기관 범위 확대(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→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 추가)
  - ④ 기술자문 범위 규정(미규정→50억 원 이상)
  - ⑤ 기술자문기관 확대(지방청·지자체→지방청·지자체·공공기관)
- **시행일** 2017년 1월(잠정, 개정안 법제심사 중)\*



## 1.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

산림청 | 산지관리과 (☎ 042-481-4141)

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장기간 전·답·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“임야”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으며,
-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또한, 2016.1.21일부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「농지법」에서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, 2016.1.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·답·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“임야”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를 운영합니다.

참고 | 국가법령정보센터>산지관리법

###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

- 추진배경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부담금 이종부과 완화
- 주요내용 2016.1.21일 기준으로 전·답·과수원으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“임야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가능
- 시행일 2017년 6월

## 2.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

| 산림청 | 산지관리과 (☎ 042-481-4141)

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
-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,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임산물의 재배가 곤란하였습니다.
- 또한,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한 대규모 임산물 재배도 제한되어 규모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- 따라서, 성토·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|참고| 국가법령정보센터>산지관리법

### 임산물재배 절차 간소화

- 추진배경 임산물재배 절차의 간소화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
- 시행일 2017년 6월

### 3. 도시림 조성·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

| 산림청 | 도시숲경관과 (☎ 042-481-4224)

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·변경, 가로수 제거 등의 허가 전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(이하 심의위원회)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.

-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가로수의 제거, 가지치기, 옮겨 심기 등이 행해져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
-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전문가,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·변경과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.

|참고| 국가법령정보센터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#### 도시림 조성·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
-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, 가로수의 제거 등에 대한 허가시 심의
- 시행일 2017년 6월

## 4.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

| 산림청 | 도시숲경관과 (☎ 042-481-4224)

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건별로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나, 앞으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에는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.

\* 소액대부료기준 : 매년 20만원 미만

- 또한,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대부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[참고]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

###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

- 추진배경 국민 불편 및 행정 낭비 최소화
- 주요내용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소액 대부료를 대부기간 중 일괄 징수
  - 대부등 기간 중 대부료 변동이 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
  - 소액대부료의 기준금액 : 매년 대부료 20만원 미만
- 시행일 2017년 6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5. 귀산촌인 용자지원 확대

| 산림청 | 사유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191)

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촌정착 안정화를 위해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2016년에 비해 190억원이 증가된 240억원을 귀산촌 창업 및 정착자금으로 용자 지원할 계획입니다.

\* ('16년) 창업자금 50억원 → ('17년)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원

- 지금까지 창업자금만 용자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주택구입 및 신축을 위한 정착자금을 용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[참고]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알림마당>공지사항>2017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

### 귀산촌인 용자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촌 정착 안정화
- 주요내용
  - ① 용자규모 및 한도
    - ('16) 규모 50억원, 한도 세대당 3억원(창업)
    - ('17) 규모 240억원, 한도 세대당 3억원(창업), 0.5억원(정착)
  - ② 자금용도 확대
    - ('16) 임업분야 창업자금
    - ('17) 임업분야 창업자금, 주택구입·신축자금
- 시행일 2017년 1월

## 6.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

산림청 | 사유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206)

표고종균을 접종·배양하여 수입된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변경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·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버섯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였습니다.
- 앞으로는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‘국내산’에서 종균 접종 배양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으며,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
\* (기존) 표고버섯 : 국내산 → (변경) 표고버섯 : 국내산(접종배양 : 수입국)

[\[참고\]](#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

###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

- **추진배경** 표고버섯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
- **주요내용**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‘국내산’에서 종균 접종 배양국을 병기하여 표시  
\* (기존) 표고버섯 : 국내산 → (변경) 표고버섯 : 국내산(접종배양 : 수입국)
- **시행일** 2017년 7월 1일

## 7.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

| 산림청 | 산림교육문화과 (☎ 042-481-1814)

내년부터 숲해설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(숲해설업)을 통한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숲해설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.

- '17년부터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창업지원 등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·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위탁운영 전환으로 인해 숲해설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숲해설 위탁운영의 추진체계와 세부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.

|참고| [산림청 홈페이지](#)>[산림정책소개](#)>[주요업무계획](#)>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

- 추진배경 숲해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
- 주요내용 숲해설가의 고용을 정부 직접 고용에서 전문업(숲해설업)에 등록된 자에게 위탁운영으로 전환
- 시행일 2017년 1월

## 8.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

| 산림청 | 산불방지와 ☎ 042-481-4251

산림재해 대응 관련 4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산림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내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사태현장예방단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, 산림보호지원단의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 증가 및 재해 취약시기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배치·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- 단기사업 : 산불, 산사태분야 (10,762명, 연간 150일고용)
- 장기사업 : 산림보호, 병해충분야 (1,456명, 연간 250일고용)

|참고|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알림마당>채용정보

###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

- 추진배경 산림재해 대응의 효율성 강화 및 고용 안정성 증가
- 주요내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사태현장예방단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, 산림보호지원단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
- 시행일 2017년 1월



